

조선의 개혁·개방은 가능한가

최응구

조선에서는 지금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부족, 식량 부족, 설비시설 노후, 기업가동 부족, 운수수단 낙후, 대외 무역 축소, 외화 고갈 등 보드로넥크(bottleneck)의 미해결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90년 조선의 국민총소득(GNI)은 231억 달러였는데 99년에는 158억 달러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90년부터 98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99년에 처음으로 6.2%라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0년에는 또 저조를 보였다. 수출입 총액도 90년 50억 달러를 넘던데로부터 98년에는 3분의 1 이하로 격감하였다.

공업부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되는 것은 전력 부족이다. 전력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공장과 설비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장 시설들에서 생산되던 원자재의 공급 중단으로 다른 공장 시설들이 또 가동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공업부문에서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생산시설의 노후화이다. 생산시설의 노후화는 전 국, 전 산업분야에서 거의 마찬가지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생산량만 추구하던 공업정책으로 하여 생산성은 낮아지고 기계와 설비는 혹사당하고 새로운 기술과 설비는 보충되지 못한 상황이 오래 지속된 가운데 지난 10년간 어려운 시기를 경과하면서 공장, 기업소의 생산시설과 설비들은 낡을대로 낡았다.

농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98년 4월 조선정부가 유엔개발계획(UNDP)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350만톤으로 떨어졌던 곡물생산은 96년에는 250만톤까지 내려 갔고 그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농사가 예년보다 잘되었다는 금년(2000년)의 곡물생산량은 350만톤으로 추정되며 부족량은 150만톤에 이른다. 유엔은 5세 이하 어린이 200만명과 취학아동 400만명이 영양실조와 저체중,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인구 2천 300만명 대다수가 적절한 식량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캐서린 베르티니 사무국장은“북한 주민 3명중 한명은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식량원조 전문가들은 몇년새 계속 악화된 기근으로 인해 250만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19) 많은 농경지와 관개시설이 침수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척박한 땅에 비료까지 없고 농기구는 연료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경제를 이미“파산된 경제”라고 보고 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조선의 경제 회생 가능성은 없으며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주요하게 아래의 몇 가지를 들고 있다.

“북한은 현재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으면 경제난 타개가 불가능하며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 유지가 어렵고 심지어 제반 사회의 붕괴 위험까지 안고 있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 경제 회생의 필수조건은 자체 개혁·개방과 대량의 외부 후원 뿐이지만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에 필수적인 물질적 여건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회생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의 자유의지 증대와 정부 통제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 여론을 확장시켜 현정부의 정권유지에 더욱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정치노선에 대한 부정은 현실적으로 전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 노선에 대해 반성할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이미 확장된 주민들의 불만 여론을 전이할 수 있는 여건이 결핍돼 있어 중국처럼 제반 사회의 변혁을 이룩하기도 불가능하다.”(20)

조선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자연재해 등 객관적인 원인외에 더 주요하게는 전면적인 구조적 위기라는데 있다. 이 위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평양정권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무너질 것”(21)이라는 헬무트 슈미트 전서독총리의 말이 현실로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속에서 조선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참고로 먼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급한 개혁·개방은 실패를 부른다. 소련은 성급하게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개혁하려다가 나라까지 망했고 그 뒤에는 성급한 경제개혁으로 무서운 진통을 겪었다.

중국은 이와는 반대로 먼저 경제개혁을 시작하였고 경제개혁도 돌을 더듬으며 내를 건너는 식(磨着石頭過河)으로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네개 단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78년 12월부터 84년 10월까지로 개혁의 초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개혁의 중심은 농촌에 있었으며 도시 개혁은 모색과 탐구에 머물렀고 그것도 처음에는 세개 도시로부터 시작하였다. 개방도 80년도의 4개 도시로부터 84년의 14개 도시로 점차 확대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기업의 효율성과 개인의 물질이익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그쳤다.

두번째 단계는 84년말부터 87년 10월까지로 개혁의 본격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와서는 개혁의 중심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 공장장 책임제, 월급 분배제도와 노동제도의 개혁, 부분적인 농산물의 시장가격으로의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국영기업에서의 생산, 판매, 인사, 월급 등의 처리에서 자체의

권한이 커졌고 고기, 달걀, 채소 가격에 대한 국가 통제가 해소되었다. 양식 등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85년부터 기업은 과거 자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던데로부터 은행에서 빌리기로 되었다.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와 상품경제 체제의 심층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87년 10월부터 91년까지로, 지난 9년간 진행된 도시와 농촌의 개혁의 기본 경험을 총화하고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인도하는 사회주의 계획상품경제라는 구호를 제출하였다. 88년 후반기부터는 인플레이가 심하여 2년간의 조절, 정돈기를 두었다.

네번째 단계는 92년부터 지금까지로, 등소평이 남방을 시찰하면서 한 말씀에 계기로 중국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전면적인 개혁·개방 단계에 진입하였다. 인플레이는 금융질서의 정돈으로 93년에 와서야 억제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은 단일한 시험, 혹은 부분적인 개혁으로부터 점차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책적인 조절로부터 제도적인 장치의 수립으로 발전하였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 상황과 수준은 비록 상이하였으나 그것이 구소련 계획경제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스탈린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중국과 조선은 50년대 후반부터 나름대로의 시도를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은 78년부터 계획경제시스템을 허물기 시작하였고 조선은 지난해까지도 고집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은 자본주의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8년 9월 17일 《노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에서는“外資는 아편과 같은 것”“외국자본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대외의존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혁·개방 노선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중공업을 핵심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99년 4월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서는 국영기업소에 대한 내각의 지도, 통제권이 더욱 강화되었고 경제운영은 각종 국가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는 2001년에 와서야 조선의 경제건설 노선의 방향 전환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2001년 1월 1일 《노동신문》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공동사설, 1월 4일 김정일 어록, 1월 7일 《노동신문》 정론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동사설, 어록, 정론 등에서는“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의 근본적인 혁신을“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다른 나라 식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대담하게 변혁을 일으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배우고 싶다고, 개혁을 해야겠는데 사람이 없다고, 중국의 경제건설 경험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말까지 있다.

이것은 60 년대에 형성된 조선의 경제관리 체계와 스탈린식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를 의미하며 경제영역에서의 일대 혁신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받아들여진다.

조선은“수령체제”의 나라이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지도자의 이념이 그 나라의 전진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1 월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조선은 개혁·개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다. 84 년 9 월에는 外資誘致를 위하여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 99 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중재법을 통과하였고 98 년에는 특별경제지대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경제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조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는 북경대학, 상해 복단대학 등에서 뉴욕대학, 북경대학, 복단대학 등과 함께 국제상법, 국제중재법, 주식회사법을 비롯하여 경제 관련 법규들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측에서 매년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들, 국가경제위원회, 대외무역부 행정관리들,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제문제 전문가들, 재판소장 등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학술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상해, 북경 등지에 유학생과 실습생 그리고 고찰단들이 파견되고 있다. 그중에는 경제관계의 실습생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찰단이 많으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한다. 오스트랄리아와 유럽에도 인재양성을 위하여 인원들이 파견되고 있으며 미국과도 교류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뉴욕대학과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미국 서부지역의 일부 대학에서는 평양에 교수들을 파견하여 강의하기로 하였고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도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조선은 外資誘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10 년전에 나진·선봉경제특구를 설치하였으며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지금도 그들은 이 지역 인프라건설과 외자유치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 남포 등 새로운 특구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준비중에 있다. 타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나라들, 그리고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

농촌에서는 97년부터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였다. 수십명으로 구성되었던 작업반 책임제를 10명 좌우의 분조관리제로 바꾸었으며 조성방식도 친척이나 마음 맞는 이웃과 자유결합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행정명령식을 대체하였다. 나라에 바치는 국가 규정량도 종래보다 훨씬 낮추어 주었다. 단 잉여 양곡에 대한 자유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통일 수매가격으로 전부 구입하였다.

관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금강산을 대외관광에 개방한데 이어 묘향산과 칠보산, 장수산 등 명산들을 관광지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국가관광총국 여승철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국대표단이 스페인의 세계관광기구(WTO)본부를 방문하는 등 관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애쓰고 있다. 최근 조선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려고 애썼으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대의 주주인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지난해까지도 조선은 자체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외자유치와 경제특구의 건설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 설비, 생산방식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외 개방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받아들인 자금, 기술, 관리방식 등은 원유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혹은 전시경제 체제하에서는 그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없다. 분배가 아니라 교환, 그것도 자유스러운 교환, 공평한 교환; 경쟁, 그것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이와 같은 교환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질서속에서만 자금, 기술, 관리방식 등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은 한개 사물의 두가지 측면으로서 어느 한쪽이 없어도 안된다.

조선은 처음에는 개혁 없는 개방만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외자유치법도 제정하였고 경제특구도 만들었다. 그러다가 87년부터 93년까지의 제 3차 7개년계획이 실패한 후 94년부터 96년까지 완충기를 두고 “농업 제 1주의, 경공업 제 1주의, 무역 제 1주의”라는 “혁명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나 또 실패하였다. 그것은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속에서 정책조정만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혁 없는 개방, 일부 정책의 조정과 같은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개혁을 시도하다가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은 자기식의 개혁·개방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 스웨덴 등 모델을 연구해 온 그들은 중국 모델을 참고하여 자기식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개혁·개방이 아닌 자기식 명칭을 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우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하여서는 조속한 경제회복,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의 안보상황으로는 외자유치도 어렵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하여서는 조속한 경제회복이 필수적이지만 지금 같이 제한된 외부지원하에서, 내부자원 고갈상태에서 주요하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로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철학, 경제학, 사회주의 理論 등 이데올로기 분야에서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인 혁명적 사상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개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의 시작은 완전히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문명으로부터 공업문명,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혁명적인 변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혁은 단기간내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변혁과정은 新舊가 교체되는 극히 어려운 과정이며 격렬한 진통을 겪게 된다. 사회의 불안정은 개혁의 최대의 위협으로 된다. 따라서 강위력한 정부가 국내정세를 리더하면서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은 이것이 가능하다.

개혁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쉬운데로부터 어려운데로, 간단한데로부터 복잡한데로 실시하여야 한다. 조선은 경제회복을 서서히 진행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제부문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경제 분야에서의 경제개혁 혹은 경제개혁에 관한 시험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의 경제개혁은 완전히 가능하며 특구 혹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구비된 도시에서의 종합적인 경제개혁 시험, 일정한 경제분야에서의 정책조정 같은 것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개혁이 지금부터 상당 기간 실시되리라고 예측된다. 최선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물론 최악의 경우는 더욱 아니다. 최선의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경제가 회복되고 외자유치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상당 기간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하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두절되거나 대폭 감소하는 경우이다.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자금, 기술, 설비 등 물질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게 교환의식, 경쟁의식, 자유의식 등 시장경제에 상응한 의식들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 이는 “종교화된 조선의 의식형태”, 사회 통제체제와 통제방식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방면에서의 전환이 선행되고 개혁·개방으로부터 오는 물질적 개선과 물질적 이익이 주민들의 피부로 느껴질 때 사회는 상당한 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지금의 경제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주민들의 불만여론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사회의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안전은 그 나라가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기초로 되며 전제조건으로 된다. 조선의 안보상황은 90년대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7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되고 중·미연합이 이루어진 뒤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한 중·조관계는 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작과 92년 중·한국교정상화로 상당히 냉각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는 조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서방대렬에 가담하였다. 조선은 러시아는 서방세계와 손을 잡고 독일식으로 한국이 조선을 통일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였으며 중국은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자본주의로 나간다고 인정하였다. 조선 단독으로 미·일·한과 맞서야 하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99년 3월 코소보전쟁과 중국대사관의 피폭사건은 조선의 대중러관계개선의 계기로 되었다. 러시아는 유럽 특히는 미국과 많은 영역에서 의연히 이익충돌이 있으며 많은 국제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일치하다고 본 조선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다시 조·중·러 진영을 형성하여 한·미·일 동맹에 대립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여 중·러와의 접근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은 앞으로도 한국과의 상대적인 세력균형을 위하여, 자신의 경제회생과 개혁·개방을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조선이 국제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로는 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에로의 진출의 키-(열쇠)로는 되지 못한다. 조선이 조선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월“조선은 개혁·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전망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이 현실로 되기를 바란다.